

## 노사관계 동향

### 노사분규 동향

◆ 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소폭 증가

○ 2005년 4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함(표 1 참조).

- 분규참가자수는 11,955명으로 전년동기의 24,778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분규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29건, 99,350일로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 : 개소, 명, 일)

	2003. 4. 25	2004. 4. 25	2005. 4. 25
노사분규 발생 건수(개소)	54	23	29
분 규 참 가 자 수(명)	11,441	24,778	11,955
근 로 손 실 일 수(일)	90,449	77,603	99,350

주 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  
자료 : 노동부.

### 노동정책 동향

◆ 고용보험제도 혁신을 위한 개정입법 예고

- 노동부는 4월 21일, 종합고용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고용보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운영
  - 고용촉진지원금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를 도입하고,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·비영리법인·노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정비
-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
  -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의사를 가진 자, 65세 이상자들을 포함하고, 자영업주에 대해 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적용을 도입
-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운영
  - 고용보험사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·운영하여 고용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
- 실업급여제도의 개편
  -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방적 구직활동입증제도를 수급자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여 실업급여의 내실화 도모
-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충
  - 지역별·업종별 고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·시설·프로그램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민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확대
  - 훈련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훈련서비스·정보제공, 자격제도 개선, 질 관리를 위한 평가사업 등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

###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#### ◆ 노사정, 비정규직 법안관련 교섭 진행

- 지난 4월 24일까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노사정간 교섭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.
  - 사회적 교섭 참여를 둘러싸고 조직내 갈등을 겪었던 민주노총이 위원장 책임

하에 사회적 교섭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사정간 교섭이 본격화됨.

- 국가인권위원회,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의견 발표
  -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추가,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 방식 적용, 파견대상의 확대방지, 고용의제 유지 등의 의견을 발표함.
- 경영계, 국가인권위 의견 철회 및 비정규법안 원안 처리를 주장
  - 경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이나 정치적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하며, 법안이 국가인권위 의견대로 수정되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켜 실업을 양산할 것이라 주장
  - 경총, 상공회의소, 전경련, 무역협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‘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’을 발표하여 국가인권위 의견을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원안처리를 촉구함.
- 노동계, 비정규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교섭과 투쟁 병행
  - 민주노총은 4월 1일, 16만 8천명(민주노총 주장)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사회양극화 저지를 위한 4시간 경고파업 및 단체행동을 진행함.
  - 양대노총 위원장은 4월 22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존중과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
  -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활용에 있어 사유제한의 명문화, 기간제한,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등의 항목에서 경영계와 대립하고 있음.
-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교섭의 합의도출 여부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시장 관행, 노동조합 내부 권력관계 등이 영향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.

주요노동일지

(2005. 3. 21~4. 24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3. 22		· 사무금융연맹: 임시대의원대회 개최, 2005년 사업계획 확정	
3. 30			· 기아자동차노조: 위원장 선출
3. 30		· 금속연맹: 임시대의원대회 개최, 위원장 선출	
4. 1	· 한국노동연구원: 장애인 고용정책 대토론회 개최	· 민주노총: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사회양극화 저지를 위한 4시간 경고파업 진행	
4. 6	· 보건의료노조: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 개최	· 민주노총: 중앙집행위원회 개최, 향후 투쟁계획 확정	
4. 7	· 노동부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· 한국노동연구원: 여성 고용촉진 및 차별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		· 현대자동차: 1/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
4. 9		· 경기지역 노사정: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	
4. 11		· 민주노총 산하 7개 산별노조: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개최	
4. 14			· 대성엠피시노사: 임단협 관련 분규중(2004. 4. 12~) 잠정합의 도출
4. 19	· 한국노총: '비정규법안,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?' 정책토론회 개최		
4. 20		· 화섬연맹: 비정규직 철폐 규탄대회 개최	· 대한항공노조: 2005년 임금인상 회사측에 위임
4. 21	· 국제노동법연구원 · 서울대 노동법연구회: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토론회 개최	· 경제 5단체장: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· 양대노총위원장: 공동기자회견 후 단식농성 돌입	
4. 22		· 한국노총: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개최	
4. 24			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: 파업 계속(3. 21~) · 울산지역플랜트노조: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, 파업 계속(3. 17~)